

광주 사립고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발각'

학운위원장 요구에 행정실장이 9과목 중 5과목 빼돌려 전달 학생 제보로 들통나...경찰, 금전 거래·윗선 개입 여부 수사 애꿎은 학생들 피해...3학년 300여명 17일 재시험 치르기로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기말고사 전체 9과목 중 5과목 시험지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지는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부모 요청으로 학교 행정실장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학교 측이 오는 17일 시험지가 유출된 과목에 대해 전체 학생(이과 213명·문과 94명)이 재시험을 치러야하는 등 피해를 보게됐다. 일각에서는 광주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입전형에서 광주 출신 학생들에게 불뚱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브리핑에서 "광주 A사립고에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치른 3학년 기말고사 일부 과목의 시험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출 시험지는 전체 9과목 가운데 등 5과목으로, 고전·화법과 작문·미적분Ⅱ·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다.

학교 측은 기말고사가 끝난 지난 11일 일부 학생으로부터 '시험문제 유출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뒤늦게 시험지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일부 학생은 "기숙사 친구가 시험 전 보던 유인물에서 시험문제가 다 출제됐다

이상하다"며 해당 학생이 봤던 유인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학교측에 알렸다.

학교 행정실장 D씨는 3학년 학생 B군 어머니 C씨의 요청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행정실 옆 인쇄소에 보관 중이던 5과목 시험지를 꺼내 지난 2일 학교와 멀리 떨어진 광주시 남구 노대동 길거리에서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과인 학생 B군의 성적은 상위 4% 수준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부부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한 순간 실수다. 흘린 것 같다. 이번이 처음으로 금전거래 등 대가는 없었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C씨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인쇄돼 있는 시험지를 한 장씩 빼줬다"고 말했다. D씨의 이같은 발언은 시험

지 유출과 관련해 학부모 C씨가 아닌 제3의 인물 개입 또는 금전 대가가 아닌 또 다른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전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학부모 C씨가 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도 퇴직을 불과 3년여 남겨둔 행정실장 D씨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때문이다.

학교 측이 신속하게 자체 조사를 벌여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시교육청에 자진 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학교 측 자체 진상조사 과정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속하게 마무리된 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시험 마무리, 11일 오전 9시 학생들 학교 측에 신고, 9시 10분 학교장 보고, 10시 학부모 C씨 등 학교장 면담,

12시 50분 학업성적관리위 소집, 및 유출 경위 확인, 오후 1시30분 부정행위 이사진 보고, 오후 5시40분 시교육청 보고로 이어졌다. 학교 측 관계자에 의한 시험지 유출이라는 초유의 일이 불거졌는데도, 그 수습 과정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12일 오후 4시 학교장 고소인 조사 직전, 3시30분께 행정실장 D씨, 학부모 C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조사를 자청했다는 점도 계획된 수습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시험지 유출 의혹이 ▲회성 유출인지 ▲관련자가 행정실장 D씨, 학부모 C씨가 전부인지 ▲금전거래는 있었는지 ▲윗선 지시나 학교 측의 조직적인 개입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도박빚 안 갚는다며 베트남 동료 납치·치사 법원, 6명 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벌려준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동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베트남인 누엔(32)씨와 한국인 조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박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베트남인 진반(29)씨와 안모(21)씨, 또 다른 안모(20)씨에게는 각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누엔씨는 범행 주동자로 죄가 무겁고 다른 피고인들도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누엔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A(31)씨에게 스포츠 도박 자금 1700만원을 빌려줬으나 A씨는 갚지 않고 고용의 한 양식장으로 도주했다.

누엔씨와 조씨 등은 A씨를 감식장에서 납치해 인근 발표해수욕장으로 데려간 뒤 2시간 가량 감금·폭행했으며 A씨가 이들을 피해 도주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하던 A씨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장흥 세모녀 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

검찰 항소심서 엄중 처벌 촉구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장흥 세모녀'를 비롯한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유모(53)씨의 현주조물방화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육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

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 지내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화강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장흥에 살던 어머니 박모(34)씨와 중학생(14), 초등학생(11) 두 딸 등 3명을 비롯해 모두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장흥 세모녀는 방화 중 나들이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전국고속노조 기자자치지부 광주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 취입사기와 관련해 12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기자차 고객에게 고개숙여 사죄한 뒤 경찰의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법 "1+1 판매" 광고 후 가격 2배 인상은 과장광고

구매했던 물건을 하나 더 덩으로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에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중전의 해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

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중전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취업사기 지휘여하 막론 엄정 수사해야"

기자차 광주공장 노조 촉구

전국고속노조 기자자치지부 광주지회(지회장 나태울)는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차 광주공장에서 또 다시 전직 노조 부지회장 신분을 이용한 취업사기가 발생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 간부의 취업사기에 침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취업사기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25대 광주지회 노조에서 더 이상의 취업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신속한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던 사건이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노조의 바람과는 달리 현직 경찰간부가 취업사기 범죄자의 도피를 돕고 비호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 다시 한번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앞으로 취업사기에 연루된

자는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하는 등 적폐를 청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취업사기에는 노조의 기능과 역할을 총동원해 사추에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나태울 광주지회장은 "현재 기자차 취업은 일부 노조·회사간부 등 개인적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면서 "광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누군가에 의해 입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기이고 비리라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마 반입 미국인교사 철창행

○국제변호사결방 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의 한 외국인학교에서 미국인 교사(33)가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대량의 대마를 반입한 혐의로 철창행.

○12일 광주지검강령부(부장검사 이계한)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해 미국 오리건주에서 254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대마 1279g을 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광주의 한 외국인학교에 재직중이던 외국인 교사(33·미국)를 구속했다.

○지난 1996년 개교 이후 외국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중인 학교측은 "개교 이래 마약 관련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약직 교사로 근무했으며, 사건 발생 후 6월 25일자로 퇴사처리했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